

연구총서 2001-05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 영 춘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자와(小澤)의 군사적 보통국 가론이 확산되면서, 북한의 핵위기 및 노동미사일 발사(1993) 그리고 대포동미사일 발사(1998)를 계기로 일본의 기본 방위정책인 신방위대강(1995), 미·일 가이드라인(1997), 한반도 등 유사(有事)에 대비한 주변사태법(1998)을 제정하는 등 북한위협론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결끄러운 안보문제를 해결하였다.

1996년 미·일 신안보선언과 뒤이은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위협론)이었지만 실제로는 급부상하는 중국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 능력을 구비한다는 명분아래, 자위대의 정식군대로서의 격상과 역할 확대 및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여 왔다.

1. 일본의 안보인식

탈냉전 이후의 일본의 안보인식을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로, 냉전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대치 및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와 중국과 대만간의 대치에서 나타나듯이 위협요소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냉전시기에 형성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증진시킨다는 것이며, 셋째로 관계증진의 한 방향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NPT 탈퇴(1993. 3. 12)와 노동1호 미사일 발사(1993. 5. 29)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안보정책을 강성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1994년에 들어서자 북한에의 제재조치 경고와 이것에 반발한 김일성 정권의 위협적인 자세로 동북아 정세는 긴박해졌다. 따라서 당시 일본정부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는 방위청과 군사적 현실주의자의 입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는 2000년 3월 8일 발간된 연례보고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0』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시 유보하고 있으나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김정일 체제에 자신을 얻을 때까지는 미사일 및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정도로 기술했으나 2001년도 백서에서는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명시했다.

2. 신안보정책의 기본방향

가. 군사적 보통국가론의 확산

1990년대 일본의 안보논쟁을 촉발시킨 주역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浪)로서, 그는 냉전종식을 계기로 일본이 소극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을 걸맞는 안보역할, 즉 PKO 등의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자와 봄은 북한 핵문제, 노동1호 발사실험 그리고 경제난 심화를 계기로 북한장래와 한반도 유사에 대한 불안심리와 맞물려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로 발표된 보고서(1994. 8)는 호소가와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에서 작성한 방위문제간담회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국제역할의 수행 및 세계적, 지역적 규모의 안보협력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미·일 안전보장의 원활한 기능을 주장하였다.

나. 신방위대강의 策定

일본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새 방위계획 대강(1995. 11. 28)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강화 ㉡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참여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 자위대 규모 축소 ㉣ AWACS(조기경보기) 4대 도입 등 질적인 전략은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냉전후의 미·일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일 안보체제는 소연방 해체 이후 최대의 잠재적 라이벌인 일본의 독자적 군사노선 내지는 패권국 추구를 막는 효과적인 틀이라는 점이다. 둘째, 미·일 안보체제의 글로벌화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체제의 목적을 일본 단독방위에서 아·태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으로서는 미·일 안보체제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본의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사고는 첫째, 미·일 동맹을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미·일 안보체제를 유지하되 지역주의와 유엔 중심을 강조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자주성을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3. 신안보정책의 전개

가. 미·일신안보 협력지침

신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확대,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일정한 군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며, 둘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처는 물론, 셋째, 미국과의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참여 명분을 주었다는 데 있다.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한 비판으로 마에다 전 방위연구소 실장은 신지침의 성립은 미·일 안보조약의 전면개정과 같은 것이며, 이에 의해 일본은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여 일본 국토가 그들의 미사일에 의해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97년 방위백서가 기술한 정도의 북한의 위협이 일본주변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일본주변사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변화하였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2001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7% 늘이는 등 군비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백서(2001)는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북한의 중국위협론과 맞물린 것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 군사력 강화

일본 정부가 1995년 11월 28일 확정된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병력과 장비의 대폭 삭감과 장비의 하이테크화와 무기의 합리적 운용 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이 양에서 질 지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방위정책은 자위대 병력을 정원 18만 명에서 16만 명(예비역 1만 5천명, 상비정원 14만 5천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350대에서 300대로 줄이는 대신 공중조기경보기(AWACS) 4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항공자위대는 1995년 말 F15 전투기를 185대 보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10대 도입할 예정(참고로 미국은 820대 보유)이다.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방위력 정비에 대하여 1996년 이후에 관한 신방위대강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삼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을 수행하였다. 하시모토 총리는 취임 이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키 위해 행정·재정개혁 등을 6대 개혁과제로 선정하면서 1997년을 재정재건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GNP대비 3% 이하로 축소(1997년 4.7%)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 방위력 증강계획(1995~2000)을 수정(1997. 12), 투입예산 중 9,200억엔을 삭감하고 전차(96→60대), 장갑차(168→157대), 호위함(8→7척), F-2 전투기(47→45대) 등의 조달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다

그러나 주요 첨단무기 도입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 전력의 질적 향상을 지속 추구함으로써 주변유사 사태에 대한 개입 여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6월 23일 발표한 1998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동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입각한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질적으로는 군사력을 줄이고 있으나 양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술 운용능력 향상 및 군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00년에 확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년)은 25조 1,600억엔 규모이며, 5년 이내에 준항공모함급 호위함과 공중급유기 등의 공격형 장비를 도입, 방위력을 증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4. 신안보정책의 변화·전망

일본은 북한의 핵위기 및 노동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신방위대강, 미·일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 위협론을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교토(京都)대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는 “1996년 미·일 신안보선언과 뒤이은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1993년 한반도 위기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급부상하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한 부시 행정부로서 일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인 중국을 억제하는 데 미·일동맹은 필요 불가결하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있는 리처드 아미티지와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2001년 말에 작성, 발표한 초당파 대일정책보고서에서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

권 행사를 통한 안보역할 분담, 관련법 개정을 통한 PKO 활동 참가 확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일본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에서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대서양과 유럽대륙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비하면 미·일동맹은 편향적이다.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일본이 태평양과 아시아를 잇는 중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일관계가 밀월시대를 맞고 있어 일본은 아시아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압력을 명분으로 안보난제를 풀려고 한다. 일본 연립여당은 이미 2001년 10월 29일 국회에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군대 보유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국내적인 조건을 이용해 일본은 개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위대를 군으로 개편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에 변경을 시도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근거를 마련한 일본 정부가 자위대 병력을 동원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나서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이 자위대의 PKF 업무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12.8)시켰으며, 2002년 초에 동티모르에 파견될 60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시설대의 무기사용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러한 PKO활동과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사(有事)법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군사력 강화에 힘을 쓸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중장기 방위정비계획에 따라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건조할 이지스 호위함 두 척에 고도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엔에 지지를 얻은 일본은 정치대국의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I. 서론	1
II.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인식	3
1. 국제 및 동북아 정세	3
2. 북한정세	7
가.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인식	7
나. 수교교섭시의 위협인식	11
III. 신안보정책의 기본방향	15
1. 군사적 보통국가론의 확산	15
2. 신방위대강의 策定	22
IV. 신안보정책의 전개	26
1. 미·일 신안보 협력지침	26
2. 주변사태법	34
3. 군관련 개헌 추진	36
4. 군사력 강화	38
가. 신방위대강의 구체적인 방위력	38
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	42
다.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47
V. 결론 및 전망	51
참고문헌	56

I. 서론

구소련의 와해에 따른 냉전체제의 붕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쳐서 복잡한 구도를 연출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의 종결과 함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동서간의 군사적 대치구조는 와해되었으나 각종의 영토문제, 종교적인 대립, 민족문제 등에 기인한 지역분쟁은 오히려 현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핵을 비롯한 미사일 등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NPT 탈퇴(1993. 3. 12)와 노동1호 미사일 발사(1993. 5. 29)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안보정책을 강성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다.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1998. 8. 31)이 사전에 예고 없이 일본의 상공을 통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를 전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이나 대만해협 위기 사태 등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보위협사태에 피동적 대응밖에 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만스럽게 인식하였다.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 요인이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요인을 여러 각도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자와(小澤)는 보통국가론을 주장하며 국제공헌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탈냉기전의 지역정세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면 1995년 말에 제시되어 1996년도에 책정된 방위계획의 대강과 1996년 4월에 발표된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 1997년 9월의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사시 군사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1999

2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년 5월의 주변사태법의 성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인식 및 북한의 위협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 및 우경화 현상이 미·일 안보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 일본의 안보체제 변화에 대하여 전망하기로 한다.

II.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인식

1. 국제 및 동북아 정세

냉전체제의 소멸은 동북아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복잡한 구도로 표출되고 있다. 1989년 4월의 중·소국교정상화를 시작으로, 1990년 9월의 한·소국교수립, 1991년 9월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1992년 8월의 한·중국교수립, 그리고 1993년 3월의 북한의 NPT 탈퇴, 1994년 7월의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이 이러한 복잡한 구도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의 인식과 대응은 1995년 말에 제시된 「1996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신방위대강)과 1996년 4월에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에서 엿볼 수 있다. 냉전구조 속에서 추진되어 왔던 일본의 안보정책은 소련의 붕괴와 미·소대결의 종식이라는 탈냉전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규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1995년 새롭게 책정된 신방위대강에는 탈냉전 이후의 국제정세를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 방위대강은 국제사회가 “냉전의 종결과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동서간의 군사적 대치구조는 소멸했으며, 세계적인 규모의 무력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편으로 “각종의 영토문제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며 또 종교상의 대립이나 민족문제 등에 기인한 지역분쟁은 오히려 현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핵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나 미사일 등의 확산이라

4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는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

그러면 냉전종결 후의 세계에서 일본이 안보적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국지적인 규모의 무력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그 성격도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분쟁은 냉전기와 같이 진영간의 긴장과 연동되는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대국의 조정력이 약화되어 사태가 악화될 위험성이 증대하였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침공으로 야기된 일련의 걸프사태는 냉전종결 후의 지역분쟁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제경제체제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위치해 있는 일본으로서는 비록 이러한 지역분쟁의 다발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원과 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지역분쟁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대량과괴 무기와 운반수단의 확산 그리고 미사일 기술의 확산, 또한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일본경제는 중동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무역국가이므로 일본의 안보관심은 전세계에 확산되어 있다.

일본은 탈냉전과 그에 따른 세계적 규모의 극적인 안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변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안보정세에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잔존하고 있어 안보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정책을 추동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²⁾

1) 防衛廳, 『防衛白書 1996』, pp. 314~315.

2) 防衛問題懇談會報告書,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あり方-21世紀に向けての展望』. 이 보고서는 권호연, 『일본신방위 정책의 분석 및 자료』 (세종연구소, 1996), pp. 57~63에 수록되어 있다.

첫째, 소련의 강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도의 방위 태세를 취해 온 유럽나라들과는 달리, 아·태지역에서의 소련의 붕괴는 안전보장환경에 있어서의 극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련의 붕괴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 레벨을 급격히 저하시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지역의 나라들이 대체로 과거보다도 안전보장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자원의 상당부분을 군사력 향상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그리고 동남아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탈냉전 후에도 군비의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둘째, 아·태지역의 안전보장 시스템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반도에서는 핵무기 확산이라는 위협을 안은 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사찰요구에 대해 NPT 탈퇴(1993. 3. 12)와 노동1호 미사일 발사(1993. 5. 29) 등 강경 자세로 대응했고, 1994년에 들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경고와 이에 반발한 김일성 정권의 위협적인 자세로 동북아 정세는 더욱 긴장되어 갔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은 대포동 사태를 전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우려하였다.

중국은 최근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정된 국제환경을 맞이하여 경제발전³⁾에 최대의 에너지를 쏟고 있으나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문제(1996), 내륙부와 연해부의 경제격차 확대 등 미해결 문제들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대륙 연안에 산재하는 섬들의 영유권

3) 무라이(村井) 일본 방위대학 부교수가 월간지 『諸君』(1990. 8)에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총체적 국력과 장기적 발전 면에서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맨 처음 문제를 제기하였다.

6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을 둘러싼 이해관계국간의 분쟁이 충돌로 비화될 위험도 경시할 수 없다. 이런 현상들은 아직 이 지역이 정치적·군사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상황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⁴⁾

셋째,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와 북서태평양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굵직한 군사대국의 이해가 집중되어 있다는 지정학적 사실이 중요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라시아대륙에 기반을 둔 대륙국가이나 그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태평양을 향한 해양국가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고, 또 이 3개국은 모두 핵무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안전보장상의 관점뿐만 아니라 점점 더 증대하는 통상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이해교차(利害交叉)를 특징으로 하는 북동아시아·북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안전보장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이같은 일본주변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안보정세가 탈냉전 이후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태지역정세에 대한 인식은 1996년의 미·일신안보공동선언(신선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신선언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대강에서 제시한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즉, 미·일안보체제가 이제까

4) 신방위대강에서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중·일관계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일본은 두 차례에 걸친 중국의 핵실험(5. 15, 8. 17)에 대해 1995년 대중 무상원조액을 1994년도 제공액(78억엔)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인도적 부분을 제외한 무상원조를 전면 동결하는 조치(8. 30)를 취하였다. 1996년초에는 센카구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결정을 선포하였다.

지 지역질서의 안전에 이바지한 것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후에도 이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1997년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의 개정, ACSA(물품과 역무의 상호제공에 대한 미·일간의 협정)의 체결 등의 방안이 미·일간의 방위협력체제를 강화를 위해 제시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로 냉전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는 남북한간의 대치 및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와 중국과 대만간의 대치에서 나타나듯이 위협요소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냉전 시기에 형성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증진시킨다는 것이며, 셋째로 관계증진의 한 방향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2. 북한정세

가.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인식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문제를 북·일수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핵무기 확산의 위험을 내포한 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전력으로 육상전차 약 3,000량을 포함해 30개 사단 약 100만 보병이 있으며, 해상전력으로 잠수함 24척과 미사일 고속정 45척 주력군, 해상함정 620척이 있고, 항공전력으로

작전기 약 810기가 있으며, 최근에는 화학병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⁵⁾ 특히 1993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거부와 핵확산금지협약(NPT) 탈퇴로 촉발된 1년 반에 걸친 일련의 한반도 위기상황의 전개는 일본을 긴장시켰다.

특히 일본 방위청은 사정거리 1,000km의 북한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극동지역의 중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⁶⁾ 1993년 5월 29일 실시된 북한의 노동1호 발사실험 성공을 계기로 도쿄를 포함한 일본 관동 지방이 북한 노동1호의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고 보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⁷⁾ 또한 일본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오관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⁸⁾

일본은 북한의 NPT 탈퇴와 노동1호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안보정책을 강성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1994년에 들어서자 북한에의 제재조치 경고와 이에 반발한 김일성 정권의 위협적인 자세로 동북아 정세는 긴박해졌다. 따라서 당시 일본정부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는 방위청과 군사적 현실주의자의 입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⁹⁾

더욱이 북한에 의해 강행된 노동1호 미사일 실험과 그에 이은 대포동1호 실험은 일본사회 내에 북한위협론을 팽배하게 만드는 결정적

5) 防衛廳, 『防衛白書 1993』, p. 62.

6) 防衛廳, 『防衛白書 1992』, p. 74.

7) 『朝日新聞』, 1993. 6. 11.

8) 森本敏, “九十年代末に緊迫する東北アジア,” 『世界週報』, 1992. 4. 28, p. 14.

9) 『朝日新聞』 1994. 9. 15. 하타 수상이 한반도가 위기상태에 빠졌을 경우 시한입법 중 유사입법을 검토한다고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대미 작전지원, 대미 후방지원, 국내인 긴급수송, 피난민 대책, 原發에 대한 경비 등이 골자였다.

계기가 되었다. 1998년 8월 31일 실시된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북한은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대포동미사일1호 발사실험은 북한의 지하핵 의혹시설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북한에 의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동시 보유가 초래할 가공할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일본은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이 사전에 예고 없이 자국의 상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일본은 대포동 사태를 전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초강경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였다.¹⁰⁾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이 돌연 체제붕괴로 가거나 군사적 모험주의 노선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DMZ에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이용하여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은 대량난민의 유입이나 주일미군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관여에서 오는 안보적 위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는 2000년 3월 8일 발간된 연례보고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0』에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보유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¹¹⁾

10)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이후 취한 일본의 대북한 제재는 식량지원 중단, 수교회담 중단, 전세기 운항 중단 등이다. 일본은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공동으로 「전역미사일방위」(TMD)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개선키본 291억 엔을 2000년 방위예산으로 배정했다. 『朝日新聞』, 1999. 8. 25.

11) 『朝日新聞』, 2000. 3. 9.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는 미국과 일본이 공

보고서는 북한의 향후 동향에 대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정치·경제 양면에서 군사위주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시 중지하고 있으나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자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김정일 체제에 자신을 얻을 때까지는 미사일 및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방위청은 2001년 5월 23일 2001년도판 「방위백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방위백서는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긴장완화를 위해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급속히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표시했다. 방위청은 여당인 자민당과 함께 국방관계합동회의를 열고 중국이 핵·미사일 및 해·공군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군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¹³⁾

2000년도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정도로 기술했으나 2001년도 백서에서는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명시했

동개발중인 TMD를 중국이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순수한 방어무기이기 때문에 인접국가와의 전략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 『朝日新聞』, 2001. 5. 23. 여기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전제로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려는 방위청의 계산이 일부 반영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일본의 한 소식통은 밝혔다. 『중앙일보』, 2001. 5. 24.

13) 『朝日新聞』, 2001. 7. 6.

다.¹⁴⁾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와 맞물려 방위청이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¹⁵⁾

2001년도 방위백서에서는 아·태지역에서 “중국·러시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간에 이해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⁶⁾

최근 북한이 사정거리 1,300여km의 노동1호 미사일을 증강 배치하고,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1호(1,500~2,200km)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대포동2호(4,000~6,000km)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본은 자국 대부분의 지역이 사정권에 있다고 판단하고 매우 민감한 반응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¹⁷⁾

일본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역지능력 보유를 추진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수교교섭시의 위협인식

북·일 수교교섭을 통해서 본 일본의 북한위협인식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제1차 수교회담(1991. 1. 30~31)에서 핵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북한의 핵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일 수교교섭은 진전될 수

14) 『朝日新聞』, 2001. 5. 23.

15) 『중앙일보』, 2001. 5. 24.

16) 『朝日新聞』, 2001. 7. 6.

17) 『조선일보』, 2001. 3. 2.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8차에 걸친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교섭 중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은혜 문제를 계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일 교섭 중단의 실질적 원인은 북한의 핵사찰 문제에 있었다.¹⁸⁾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부터 1994년 10월 21일 미·북간 핵교섭 타결까지 북·일 수교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6년 9월에 한국에서 발생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북·일 관계에 진전이 없었다. 잠수함사건이 해결된 후 북·일간 교섭이 재개되었지만 1997년에 들어와서 북·일 관계는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 일본인 납치의혹사건, 각성제 밀수사건, 노동1호 미사일 재배치 및 추가배치사건 등으로 다시 교착상태에 봉착하였다.

일본인 납치의혹사건으로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한국에서 잠수함 침투사건(1996. 9)을 일으키자 일본의 매스컴은 북한은 못 믿을 국가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日本經濟新聞』은 특집대담을 기획(8. 1~2)하여 다나카(田中明彦) 도쿄대 교수를 등장시켜 “북한이 판단을 잘못할까 걱정이다”,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한 국가”라고 대서 특필하였다.

1997년 1월 13일 『아사히신문』 사실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야기된 긴장을 밖으로 표출한 심각한 사건이다. 일본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직시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관한 ‘일본주변 유사’, 즉 ‘한반도 유사’에 대한 유사법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18) 小此木政夫, “日朝國交交渉 と日本の役割,” 小此木政夫 編, 『ポスト冷戦の朝鮮半島』,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4), p. 266.

일본인 납치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족연락회」를 1997년 1월 결성한 후 1997년 3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납치사건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신병을 북한에 요구하였다. 이 당시 일본의 유명 대중월간지인 「諸君」은 니카타현의 중학교 1학년생인 메구미양을 납치한 북한의 비정한 납치지령의 배경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을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한 국가라고 단정하였다.¹⁹⁾

하시모토 수상은 일본인 납치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진정 및 매스미디어의 북한 비판에 의한 여론의 악화, 그리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문제로 인하여 그가 시도하려던 북·일교섭은 교착상태에 봉착하였다.

일본측이 납치문제를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은 자민당이 국민여론의 악화로 더 이상 수교교섭을 서두를 계획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일본 최고의 대중 월간지인 「文藝春秋」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조직인 「낙동강」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국가적 사기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²⁰⁾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제10차 북·일 수교교섭(2000. 8. 21~25)은 본격 협상의 기반을 다지는 회담이었다. 교섭은 북한의 선 과거청산 요구와 일본의 납치의혹 동시 해결 주장으로 평행선을 그었다.

일본은 북·미 관계를 고려하면서 북·일 주요 현안인 납치, 미사일문제 등에 성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신중한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테러참사(2001. 9. 11)이후 미국의 후방지원 업무를 위하여 자위

19) 石高健次, “北朝鮮 「めぐみさん 拉致事件」 を徹底追及する,” 「諸君」(1997. 4), pp. 72~80.

20) 張龍雲, “北朝鮮日本人拉致組織 「洛東江」の二十年,” 「文藝春秋」(1998. 6), pp. 106~121.

14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대과병 허용정책과 헌법개정 움직임이 빠르게 보이고 있는 일본은 일본 국내의 북한위협 인식을 이용하고 있다.

Ⅲ. 신안보정책의 기본방향

1. 군사적 보통국가론의 확산

1989년 냉전이 붕괴됨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이 약해지는 반면, 일본 경제력의 세계화로 인해 그 이해관계도 광범위해졌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기대도 한층 커졌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국제공헌론이 기세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에서도 보수 양당제의 출현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정계재편성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큰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일본의 기존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은 안보정책에 있어서 외교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이들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경제의 번영에 있어서 미·일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안전보장의 비호를 잃을 경우 일본의 경제가 위협에 처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안보정책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자위를 중시하고, 집단적인 안전보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일 안보체제는 위헌이 아니며 최소한의 개별적인 자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급격한 군사력의 강화와 군사적인 국제공헌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국제연합을 통한 보편적인 안전보장을 인정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안보논쟁을 촉발시킨 주역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로서, 그는 냉전종식을 계기로 일본이 소극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안보역할, 즉 PKO 등의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오자와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무장 경제우선주의 노선은 역할이

중식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오자와의 저서 『일본개조계획』(1993)은 1994년 2월말까지 64만부가 팔려 오자와 붐을 형성하였다.²¹⁾

오자와 붐은 북한 핵문제, 노동1호 발사실험 그리고 경제난 심화를 계기로 북한장래와 한반도 유사에 대한 불안심리와 맞물려서 이루어졌다. 그는 국제연합군에의 자위대 참가가 일본의 현행 헌법, 미·일 안보조약, 유엔헌장의 틀 속에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헌법의 개정보다는 헌법의 해석에 의해 현실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자와류(流)의 현실주의자는 군사적인 국제공헌에도 적극적이다. 물론 자위대를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양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질적인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육상자위대의 정원도 감원하고 고도의 정보화된 장비의 도입을 통하여 질을 높이는 것이다.

오자와의 구상은 국제공헌에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수주의자와 다르지만 국제연합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의 차이점은 그 당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인가의 문제이다. 오자와는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은 전부 집단안전보장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 정부는 유엔군의 활동만이 집단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이 유엔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없느냐는 유엔군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의 임무가 무력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본은 참가할 수 없다는 기존의 현실주의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 당시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21)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東京: 講談社, 1993).

자민당의 온건파이며 오자와의 대항세력인 가이후(海部) 수상의 집권 시기였으며, 그가 일본의 인적(人的)인 공헌에 대해서는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PKO 협력법안은 1년 이상의 진통을 겪고 1992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PKO 협력법안은 평화유지활동과 인도적인 차원에 국한되었다. 이 법안 하에서 자위대의 임무는 의료, 수송, 건설 등을 포함한 후방지원 업무에 한정되었다.

1993년에 봄에는 캄보디아의 총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PKO 요원(문민경찰관)이 파견되었는데, 캄보디아의 무장집단에 의하여 일본인 문민경찰관을 포함한 UNTAC 요원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본인 문민경찰관뿐만 아니라 총선거의 감사를 위해 파견된 선거감시원의 신변보장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PKF 업무의 참가 활동을 해제하거나 PKO 법안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참가하여 이들을 경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오자와를 주축으로 한 자위대 역할 확대론자가 세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안보논쟁은 신방위대강(1995. 11)이 책정되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로 발표된 보고서(1994. 8)는 호소가와 수상의 사적 자문기구에서 작성한 방위문제간담회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방위대강을 작성하기 위한 중간 검토결과로 발표되었다.²²⁾

이 보고서의 특징은 국제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계적, 지역적 규모의 안보협력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미·일 안전보장의 원활한 기능을 주장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필요최소한도의 방위력 정비 기준이 되고 있는

22) 『朝日新聞』, 1994. 8. 12.

기반적 방위력 수준은 불변, 둘째, 해·공 자위대의 전투장비는 현 수준 유지, 셋째, 육상자위대의 현정원(18만명) 충원율을 고려, 15만명 체제유지, 넷째, 유사시 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비자위관계도 확립, 다섯째, 불안정요인의 조기포착을 위한 정보수집능력 강화, 여섯째, 즉응태세 완비를 위한 기동력·수송력 강화, 일곱째, 북한·중국의 미사일에 대응 가능한 TMD 구상, 여덟째, 자위대의 원활한 국제공헌 활동을 보장하는 PKO 여건 정비인데, 이는 유엔하에서의 다각적 협력을 중시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자위대의 주요 업무로 하는 것과 평화유지군(PKF)를 포함한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다.

이 보고서는 오자와의 구상과 유사성이 많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을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적으로는 1993년 비자민 8개 정파의 호소가와(일본신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오자와가 정치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에 따라 자위대 역할 확대론자들의 입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위대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에 대하여 1991년 2월에는 찬성이 46%, 반대 38%인 데 비하여 1994년 1월에는 찬성이 48%, 반대가 31로 여론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²³⁾

그리고 오자와 등 자위대 역할확대론자를 견제할 사회당과 같은 강력한 야당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당이 몰락한 것은 연립정권에 참여하여 헌법, 자위대, 미·일 안보 등과 관련한 기본노선을 전환시킴으로써 이념적으로 퇴색하였기 때문이다. 리버럴한 세력인 민주당이나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 강력한 여론의 지지아래 진행되고 있는 총

23) 『世論調査年鑑』(東京: 日本總理部, 1991), p. 140; 『讀賣新聞』, 1994. 5. 16.

체적 보수화 현상²⁴⁾을 저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외교적 국제정치력 신장을 주장하는 보통국가론은 즉각적으로 후나바이 요이치의 ‘지구시민과위’(global civilian power)나 다케무라 마사요시의 ‘작지만 빛나는 나라’와 같은 소프트 파워론을 등장시켰다.²⁵⁾ 이 주장은 비록 보통국가론만큼의 폭넓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냉전종식 후 거의 완전히 세력을 상실한 평화주의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진보진영의 유일한 대안으로 이해된다.

이 주장의 기본적인 발상의 출발점은 현재의 지배적인 국제질서나 가치관을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변화 가능한 것, 개혁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후나바시는 시빌리언 파워에 대하여 “시발리언 파워란 정글의 법칙이 지배적인 국제사회 관계를 문명화, 시빌리언화하는 힘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생성하고 성장해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국제사회가 무력에 의한 세력균형보다는 상호협력에 의한 비군사적이고 다자적인 수단에 의해 유지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일본이 야말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진화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미동맹에 관해서 시민과위론은 당

24)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는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국내 정치변동, 경제의 침체 및 금융위기가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졌고 이것이 일본인의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199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유주의 사관(史觀)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정계, 언론계가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안보측면에서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와 맞물려 전개되었다.

25) Yoichi Funabashi, “Japan and the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pp. 58~74; 武村正義, 『小さくともキラリ國: 日本』(東京: 光文社, 1994).

장의 전환기에는 미·일 안보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장래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시주둔 없는 안보론” 혹은 미군의 병력 감축론을 주장하였다.

이 견해는 동아시아 위기상황에서 대미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반대가 강하지만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히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이 외국에서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은 공통적이며, 중국, 대만, 핵확산금지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일본 나름의 외교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자위대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전적으로 전수 방위를 위한 군사목적을 지켜야 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는 어디까지나 비군사적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해서는 일본은 원폭피해국가로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특히 북한, 중국에 대해서는 심각한 비판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일본의 미·일 안보동맹의 의존도를 줄이고 다자간 안보체제의 수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문민통제의 방위정책을 강화하여 비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군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위간담회 보고서와 오자와 구상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는 국제적 요인으로는 1992년부터 북한이 미국의 핵사찰 요구에 대항하여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고 1993년 5월에는 노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일이 북한을 맹렬히 비난하자 김일성 정권이 더욱 위협적 자세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자국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나 유엔의 제재조치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 미국의 후방지원 허용여부, 유사입법 제정여부 등이 제기되었으며 자위대 역할확대론자들의 입장이 더욱 강화되었다.

방위간담회 보고서가 국제협력 또는 다자주의적 안보협력과 미·일 안보협력을 양축으로 작성된 데 대하여, 미국은 오자와 등의 영향력 확대가 미·일 동맹관계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미·일 안보협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신방위대강의 입장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나이(Nye) 이니셔티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즉 방위간담회가 제시한 자립적인 방위지향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 변화되었다.²⁶⁾

미국은 일본의 주변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인 미·일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중국의 군비증강 등 중국의 대두를 들어 일본을 설득하였다.²⁷⁾ 또 다른 견해는 일본이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른 미국이탈 조짐으로 미국이 인식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²⁸⁾

따라서 오자와 등이 주장하는 자립적인 방위지향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신방위대강에서는 미·일 안보협력의 중시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26) 船橋羊一, “日本安保再定義 全解部,” 『世界』 (1996. 5), pp. 22~53.

27) Mike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Restructuring U.S.-Japan Security Rel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p. 12.

28) 佐佐木芳隆, 『新秩序への道: 多國間安保日米同盟』 (東京: 中央公論社, 1995), pp. 321~355. 오자와는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철수에 대비한 새로운 안보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신방위대강의 策定

일본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새 방위계획 대강(1995. 11. 28)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강화,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 자위대 규모 축소, ㉣ AWACS (조기경보기) 4대 도입 등 질적인 전략은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8년 구(舊)대강에서는 미·일 안보체제를 “일본에 대한 침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 그 역할을 자국 방위에 국한했었다. 그러나 신대강에서는 “미·일 안보체제가 일본은 물론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보장환경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개정했다. 이는 미·일 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일본의 자국방위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일 양국은 냉전 종결, 소련의 해체, 미·일경제의 역학관계 변화 등 미·일 안보체제를 둘러싼 냉전환경에 이어서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선 러시아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일본과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후의 미·일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일 안보체제는 소연방 해체 이후 최대의 잠재적 라이벌인 일본의 독자적 군사노선 내지는 패권국 추구를 막는 효과적인 틀이라는 점이다.

둘째, 미·일 안보체제의 글로벌화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체제의 목적을 일본 단독방위에서 아·태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축으로 전환하는 ‘뉴비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뉴비전은 옛소련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미·일 안보체제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지역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셉 나이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최근 냉전종결 등의 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자간 안보체제에 관한 미국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독자적 노선을 다자간 안보의 틀 속에서 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⁹⁾

셋째, 냉전후 미국의 중대한 이익인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에 있어 위협세력은 현재 중국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중 연계일 것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과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의도는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³⁰⁾ 미국으로서는 미·일 안보체제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라이벌인 일본을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로 미국이 일본내 기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9) Joseph Nye,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89 (Winter 1992~93), pp. 96~115.

30) 남지나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Hisahiro Kanayama, “The Future Impor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124E (June 1994), pp. 5~23.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해군의 수빅灣 철수와 극동 소련 함대의 감란기지 철수를 계기로 초래된 힘의 공백을 중국 해군이 메우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大洋海軍」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남사군도를 비롯한 대서양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일 안보 재조정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대외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할 것이며, 특히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에 합당한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사고는 첫째, 미·일 동맹을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미·일 안보체제를 유지하되 지역주의와 유엔 중심을 강조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자주성을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대강의 내용 중 또 한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다각적 안보’ 개념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PKO를 비롯해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아시아지역포럼(ARF) 등의 회원 국가와 다각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이론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 왔다.

일본은 아·태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중국·러시아 등 지역국가들과 양국간의 군사교류를 넓혀 상호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아시아 각국으로 연계시키는 지역중심의 다자간 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와 같이 역할확대 전략의 전개에 따라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역내 국가들로부터 군비증강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을 제고시켜 보다 자주적 입장에서 안보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새 방위계획 대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PKO 참여, 대규모 재해와 테러에 대한 대응 등 일본의

국제적인 군사공헌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냉전구도의 붕괴에 따라 옛소련의 위협을 삭제한 반면 한반도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방위청은 다양한 사태의 내용으로 “일본에 대량 난민이 도래할 경우, 재외국민의 긴급피난, 浮遊機雷, 국제연합이 경제제재를 결의한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유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의 역할분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자와 등이 주장하는 논의들은 미·일 안보체제강화라는 틀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미·일 안보협력 과정에서 전문적인 군사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방위청 등 군사전문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일본의 우경화 현상으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IV. 신안보정책의 전개

1. 미·일 신안보 협력지침

국제협조 또는 다각주의적인 안보협력과 미·일 안보협력을 양측으로 제시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미·일 안보협력을 주되게 내세운 신대강의 입장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미국의 영향, 좀더 구체적으로 나이(J. Nye) 국방차관보가 이끄는 그룹의 역할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한다.³¹⁾

1995년 2월 28일에 작성된 나이 보고서의 특징은, 첫째, 이후 20년에 걸쳐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방위능력으로 10만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방위능력의 유지와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미·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의 다각적인 안전보장협력을 위해 대화의 촉진과 적극적인 의의를 정식으로 인정한 점이다. 미·일 안보관계의 재정의 문제도 워싱턴의 일방적인 아니셔티브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와타나베가 설명하듯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³²⁾

나이 아니셔티브가 일본 국내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으로는 군사적 현실주의자의 주장대로 자위대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걸프전쟁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은 일본이 얼마나 위기에 약한 시스템인가 통감하였다. 따라서 당초에는 PKO에 자위대

31) 船橋洋一, “一米安保再定義の全解部,” 『世界』 (1996. 5), pp. 22~53.

32) 渡邊沼夫, “日米安全保障關係の新展開,” 『國際問題』 (1998. 3), pp. 24~25.

를 파견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던 여론도 점점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일본국민은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처럼 군사적 현실주의의 입장을 미·일안보 재정의의 과정에서 점점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6년 4월 하시모토 수상과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미·일 양국 국민에의 메시지: 21세기에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미·일안보가 극동의 범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신안보선언은 실질적인 안보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일 신안보선언 이후 자민당의 국방측 및 자위대의 간부들은 신대강이 평화시에서 유사시로 이행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였고,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신가이드라인을 작성하려고 하였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1996년 9월 19일 제1차 중간보고안, 1997년 6월 8일 제2차 중간보고안, 1997년 9월 23일 최종보고안이 확정되었다. 제1차 중간보고안은 미·일간의 협력사항을 ① 평상시 협력, ②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③ 일본 주변지역 사태에 대한 협력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미·일은 최초로 극동이라는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으로 확장시켰다.

제2차 중간보고안의 특징은 새로운 범위의 일본 주변의 유사시에 대비한 공해 및 상공에서 미국과 자위대의 실효성의 역점을 둔 폭넓은 6개 분야의 40개 항목을 검토하였다.³³⁾ 최종보고안은 1차 보고안에서 합의된 평상시 협력,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

33) 防衛協力小委員會, 『日本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とりまとめ』(東京: 防衛廳, 1997), pp. 1~31.

방법, 일본 주변유사에 대한 6개 분야의 40개 항목을 확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이 첨가되었다.

최종 방위협력지침과 1978년 제정된 방위협력지침³⁴⁾을 비교해 보면 첫째, 평상시 협력은 침략미연방지인 데 반해 과거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보유하고 미국에게 시설을 제공한다.

미국은 핵억지력을 보유하며 즉각 대응부대를 운용·증원하고 미·일은 침략에 대비하여 작전·정보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것이다. 최종 협력지침은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갖는다. 미국은 핵억지력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에 배치한 병력을 유지한다. 특히 정보교환과 정책협의를 위해 미·일 안보보장실무협의회(SSO)와 미·일 안전보장실무협의회(SSC)를 각각 설치한다. SCC는 미국 측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서 외무장관과 방위청장관이 참가하며 SSC는 일본측에서 외무성 북미국장과 방위청 방위국장이, 미국 측에서 국무차관보와 국방차관보가 참가한다. 이밖에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국제구호활동에 협력한다.

둘째,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 즉 일본 유사시의 과거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한정적이며 소규모의 침략을 자위대로 격퇴하며, 자력으로 격퇴하기 어려우면 미군의 협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최종 협력지침은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미·일간 조정기능을 신속히 시

34) 미·일은 1970년대 후반 소련의 극동 및 인도양에서 해군을 증강(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자 이러한 신냉전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위협력을 개시하였으며, 일본의 해상소송로전략을 추진하였다. 극동 유사의 경우 첫째, 미 해군은 위협의 대상인 극동소련의 해·공군기지를 공격하고, 둘째,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지원하며 소련함대의 3해협의 통과를 봉쇄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작한 뒤 합의에 따라 준비된 선택단계에 의거, 준비를 진행한다. 무력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는 일본은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기에 침략을 격퇴하고 자위대는 일본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방어작전에 돌입한다. 미국은 일본에 적절한 협력을 제공하는 한편 자위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조치를 취한다.

셋째,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 협력에 있어서 과거 협력지침은 극동지역에서 안전이 저해될 경우 미군의 병참지원에 대해 연구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 협력사항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지침은 난민구호·이송, 피난민에 대한 응급물자지원 등 인도적 조치와 일본주변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난활동, 기뢰제거·선박검사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비협력에 있어서 미·일은 공동작전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력기준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메카니즘을 설치하고, 또한 유사시 백악관과 일본 총리공관을 잇는 핫라인이 연결되고 양국 수뇌부는 정보교환을 통해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 메카니즘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신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을 첫째,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확대,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일정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둘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처는 물론, 셋째, 미국과의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참여 명분을 주었다는 데 있다.

새 지침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지침이 일본 단독 유사(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 한·미·일 협력방안)였다면 새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를 주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

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물론 양측은 최종합의서에 일본 주변 유사(유사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6월 중간보고 발표 이후 ‘일본주변유사’에 대만해협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 방위관계자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을 주변유사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 주변유사시에 대비한 인도주의 활동, 일본 주변지역 탐색·구조 등을 골자로 한 방위지침 최종안 6개 분야 40개 항목 중에서, 특히 피난민 구조·이송, 주한일본인 철수, 기뢰 소해, 경제봉쇄 등에 따른 임검활동 등은 일본 함정과 군용기가 한국 영해·영공에 들어오는 근거가 돼 필연적으로 주권침해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표-1> 일본 주변 유사시 미·일협력 주요 항목³⁵⁾

분 야	구 체 항 목
인도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지로 인원 및 보급품 수송 - 재해지로 의료, 통신 및 수송 - 피난민 구조 및 이송, 응급물자지급
수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수색, 구조, 정보교환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경제제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임검) 및 관련활동 - 정보교환
비전투원 피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환 - 자위대 시설 및 민간항만 공항의 사용 - 일본인 입국시 통관, 출입국 관리 및 검역
미국활동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 등을 위한 자위대 시설 및 민간항만 공항의 사용 - 자위대 시설 등에서의 인원 및 물자의 하역장소 및 보관 시설 확보 - 자위대 시설 및 민간 항만, 공항의 운용시간 연장 - 미항공기의 자위대 비행장 사용, 훈련장 제공 - 자위대 시설 등에서의 물자(무기 탄약 제외) 및 연료, 유지, 유탄유 제공 - 공해상의 미함정에 대한 해상수송, 미 함정, 항공, 차량의 수리 정비 - 일본에 후송된 부상자의 치료·이송, 의약품 및 위생기구 제공 - 미군시설구역 주변해역의 경계 감시 - 미·일관계기관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 및 기자재 제공 - 미 함정의 입출항 지원
자위대와 미군의 운용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환에 의한 경계감시체제의 정비 - 공해상의 기뢰 제거

35) 『朝日新聞』, 1997. 9. 24.

일본에서 전쟁 가능성은 보통 ‘유사’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는 본토유사와 주변부유사 2가지가 있다. 동 조사는 이 2가지 유사에 관해 물었는데 본토유사 가능성보다 주변부유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3%의 응답자가 우려가 “크다,” 41.1%가 “다소 있다,” 30.5%가 “거의 없다.” 14.0%가 “전혀 없다” 7.2%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에 “가까운 장래에 일본의 주변지역에서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8%가 “크다,” 49.6%가 “다소 있다.” 21.3%가 “거의 없다,” 8.5%가 “전혀 없다.” 6.8%가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즉, 본토유사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48.4% 대 44.5%로 비슷한 데에 비하여 주변부유사는 긍정이 63.4%로 부정 29.8%보다 2배가 넘는 것이다.³⁶⁾ 일본이 과거에 비해 우경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요미우리 등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의 우경화 부추김은 1990년대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지침 내지는 신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고바야시 교수는 신안보정책이 소련이 붕괴된 지금에도 거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미국에 동조하는 일본의 정치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지침에 따라 아시아는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전화에 휩싸일 위험이 증대했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³⁷⁾ 이를 대신할 방법으로서 고바야

36) 讀賣新聞社가 1997년 8월 30일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며, 발표는 9월 7일 하였다.

시 교수는 평화외교에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에다 전 방위연구소 실장도 신지침의 성립은 미·일 안보조약의 전면개정과 같은 것이며, 이에 의해 일본은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³⁸⁾ 즉,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여 일본 국토가 그들의 미사일에 의해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97년 방위백서가 기술한 정도의 북한의 위협이 일본주변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일본주변사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⁹⁾

주변사태가 발생해도 일본에게는 난민이 도래나 재외일본인의 피난, 그리고 기뢰 제거 등 이 외에는 실질적인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도 신지침이 개정은 미국의 국익에 동등하여 전전의 체제를 복구하려는 생각이 있음이 나타난다고 한다.

다른 시각은 일본도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보통국가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지침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적 견해이다. 예를 들어, 기타오카 동경대 교수는 일본은 중국에는 오자오 현 자유당 총재가 표명했듯이 보통국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⁴⁰⁾

37) 疏林直守, “新カイトテイン 絶望への道: 一味安保の根本的轉換を,” 『軍縮問題資料』 (1997. 11), pp. 4~13.

38) 前田壽夫, “カイトテイン 見直し=戦争への道,” 『軍縮問題資料』 (1997. 8) pp. 18~25.

39) 前田壽夫, “97年版防衛白書を問う: 新カイトテインに向けて,” 『軍縮問題資料』, (1997. 11), pp. 38~45. 일본정부는 1997년도 연례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이 여전히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불안 요소라고 지적하고 역내 안정된 안보환경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미·일 안보체제 강화노력과 긴급사태에 대비한 법제 정비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0) 北岡伸一, “橋本外交の現状と課題,” 『アジア時報』 (1998. 8), pp. 20~47.

2. 주변사태법

1998년 4월 28일 각의에서 신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주변사태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법안은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주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압행동에 나서는 미군에의 지원내용과 실시과정을 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평화적 진보주의자(신민당)는 “헌법문제 등에서 의문점이 많고, 여당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주의자(자민당)는 “국내 정치보다는 외교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민당의 저항을 무시하고 각의 결정을 추진하였다.⁴¹⁾

주변사태법안의 비판은 주변사태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지역의 이미지를 없애면서 미군에 협력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투명한 후방지원에 대한 비판이다. 자위대의 수송협력의 장소가 되는 후방지역의 정의에 대해서도 “일본 영역 또는 전투행위가 행해지지 않고, 또한 활동기간 동안 전투행위가 행해질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후방지원의 개념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시 취할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성립(1998. 5.)시켰으며, 미국과 협력범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1999년 8월에 일본방위청은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 개발을 위한 미·일 공동기술연구를 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TMD가 해외미군을 방어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미국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명칭대신 중립적인 탄도미사일방어(BMD)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41) 『朝日新聞』, 1998. 4. 28.

그리고 일본은 국가미사일방어(NMD), TMD 계획을 유일하게 지지하고 있다.

2001년 4월에 출범한 고이즈미 정부의 대외노선도 ‘21세기의 정치 대국화’ 대외정책 노선과 이를 위한 ‘지도력 분담’(power-sharing)을 지향한 미·일 동맹강화의 틀 내에서 추구될 것이므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 틀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한 상호주의(대북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시 정부는 일본의 헌법 9조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하면서서라도 미사일방어(MD)계획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바람직하며 군사비 부담이 늘더라도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이 증대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변화하였다. 일본 정부·자민당은 당초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2년 앞당겨 작성하기로 한 데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⁴²⁾ 일본은 자위대의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кина와 등 남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17% 늘이는 등 군비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백서(2001)는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중국위협론과 맞물린 것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방위계획에는 일본이 미국과 공동연구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계획이 구체화될 것에 대비,

42) 『日本經濟新聞』, 2001. 8. 6.

육·해·공군 자위대에 중복되어 있는 지휘명령체계를 통합하고 조직·장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3. 군관련 개헌 추진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5월 2일, 국가목표, 통치형태 등 장기전략 수립을 위해 자민당에 설치하는 국가전략본부의 핵심활동이 헌법 개정이라고 밝혔다.⁴³⁾ 이에 따라 전쟁포기와 무력행사금지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 제9조가 개정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유사법제 정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 등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최대의 장애물은 헌법 9 조였다.

일본 자민당 최대파벌인 하시모토파가 개헌의 기본방향을 2000년 12월 마련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전쟁포기와 군대보유를 금지한, 이른바 ‘평화조항’인 제9조로서, 자위를 목적으로 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고, 또 유엔 등의 요청이 있으면 집단안전보장을 위해 외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으며, 천황을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 명시, 상징적 지위를 강화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여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대표도 자위대를 ‘국군’으로 바꿔 불러야 하며 집단적 자위권 발동 권한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의원과 참의원에는 2001년 1월 「헌

43) 『朝日新聞』, 2001. 5. 2.

법조사회」가 설치되어 개헌에 관한 의견수렴과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 헌법조사회는 2004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명당, 사회당, 공상당과 민국당내 일부 진보세력은 반대주장 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평화조항 때문에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거나 당장 개헌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시각은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테러 참사(2001. 9. 11)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을 자위대가 후방에서 지원할수 있는 ‘테러대책 특별법안’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자위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 5)하여 통과(10. 29)시켰다. 이번 법률과 자위대는 자국내에 한정했던 자위대의 미군지원 활동을 타국영역으로까지 넓히게 되었으며, 무기와 탄약 등 전쟁과 직접 관련된 물자들도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무기사용범위도 본인의 관리하에 있는 사람의 보호까지로 확대하였다. 이 법은 2년 한시법이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전 국회승인도 필요없다.⁴⁴⁾ 고이즈미 총리는 2년 한시법인 이 법을 영구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자위대의 전쟁 지원을 위한 해외파병 허용을 결국 지난 50년간 일본과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전략질서의 기본 요소였던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일본의 의도로 파악된다.

44) 국회에서 함께 통과(2001. 10. 29)된 자위대법 개정안은 자위대가 주일 미군기지·자위대시설을 경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기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게릴라 침입방지, 치안유지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해상침입 선박 저지 등을 위해서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4. 군사력 강화

가. 신방위대강의 구체적인 방위력

일본 정부가 1995년 11월 28일 확정된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병력과 장비의 대폭 삭감과 장비의 하이테크화와 무기의 합리적 운용 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이 양에서 질 지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방위정책⁴⁵⁾은 자위대 병력을 정원 18만 명에서 16만 명(예비역 1만 5천명, 상비정원 14만 5천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육상자위대는 12개 사단에서 8개 사단으로 줄어들었으나 헬기공수여단이 신설돼 전력손실을 보강했다.

전차나 대포 등 전투중심장비는 내구년수가 지난 장비를 새로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10년에 걸쳐 삭감한다. 전차의 경우, 구형인 61식 전차를 중심으로, 현행 1,200대 중 300대 정도를 삭감하였다. 61식 전차는 관동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에 관동지방의 부족분은 북해도로부터 신형전차를 갖고 와서 메우기로 하였다.⁴⁶⁾

아울러 1,500만 명 규모의 ‘즉응 예비자위관’이라는 동원 예비군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태까지도 ‘예비자위관’(4만 6천명, 훈련 연 5일)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임무가 기지 경비 등 후방지원업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발하여 전선작전이나 게릴라 행동(가령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의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훈련도 현행의 연 5일에서 21일로 증가시켰다.

45) 『防衛白書 1996』, pp. 73~134.

46) 『朝日新聞』 1995. 5. 23; 『防衛白書, 1996』, p. 123.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정수를 60척에서 5척으로, 소해정 선단을 2개부대에서 1부대로, P-3C 대잠함초계기를 100대에서 80대로 각각 감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비인 잠수함은 16척 그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P-3C의 레이더를 강화한다든지 영상 전송장치를 갖추는 등 잠수함의 추적뿐만 아니라 수상 감시능력도 증대시키기로 하였다.⁴⁷⁾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350대에서 300대로 줄이는 대신 공중조기경보기(AWACS) 4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1995년 말 운용되고 있는 주력 전투기 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행기는 F-15이다. 이러한 세계 최강의 요격전투기 F-15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으며(그 밖에 사우디아라비아가 30대, 이스라엘이 21대 보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1995년 말 현재 이를 185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최종적으로 210대 도입 예정, 참고로 미국은 820대 보유), 한 편대에 F-15를 24대씩 배치시켜 요격전투기 부대를 7개 편대로 운용하고 있다. F-15는 1980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F-4EJ(F-4의 개량형)는 점차로 퇴역하고 1995년에는 3편대 72대가 운용되고 있다.(그 밖에 ‘예비기’로서 F-4가 50대 정도 있다).

이번 신방위대강에서는 F-15로 구성된 7개 편대는 그대로 두고, F-4EJ의 요격부대를 3개 편대에서 2개 편대로 1개 편대를 삭감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F-4EJ 1개 편대의 전투기와 예비기 일부(1개 편대의 전투기 수를 24대에서 22대로 감축)를 합쳐 50대 정도를 퇴역 시킴으로써, 요격전투기 보유대수를 350대에서 300대로 줄이게 되었다.(전투기의 총수는 430대에서 400대로 감축) 이러한 조치는 사실

47) 『朝日新聞』, 1995. 5. 24.

상 오래된 기종의 전투기를 약간 줄이는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는 요격전투기 능력이 전투기 숫자만큼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10개편대 중 1개 편대(新田原 소재)를 삭감한다는 자체는 그런 대로 군비축소의 제스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알기 쉽게 단순화시키면 요격전투기 부대의 능력은 100에서 95 정도로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F-15의 도입은 이미 달성되기는 하였으나, 1996년부터의 5개년계획에서는 제조능력 유지와 소모분의 보충을 위해 F-15(정확히 말하면 F-15DJ)를 4대 새로 도입하고 1980년 초에 도입했던 초기 F-15의 성능보충을 위해 개량작업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공중급유기이다. 그 당시 일본의 거의 모든 전투기나 수송기에는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일본 방위청이나 자민당측은 PKO 파견이나 비행훈련시 체공시간 연장을 위하여 공중급유기의 도입(4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회당과 사きが게측은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행동반경을 대폭 연장시키기 때문에 인접국가에 위협이 되는 등 전수방위(오로지 수비만 하는 방위체제)의 원칙을 넘어선다고 이에 적극 반대하였다. 결국 5개년계획에서는 공중급유기의 성능, 운용구상 등 공중급유기에 관해 검토하여, 결론을 얻어 대처한다고 일단 이 결정을 유보하였다.

공중급유기는 과거에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일본의 전투기와 전폭기의 행동반경·체공시간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는 관계로, F-15의 전투행동반경이 1,500km(항속거리는 4,600km)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 번이라도 중간급유를 받으면 행동반경은 3,000km 이상으로 증가되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중국 내륙까지 전투반경을

넓힐 수 있게 되어 일본주변지역에 대한 무력행사를 충분히 가능케 한다.⁴⁸⁾

현재 방위청측이 공중급유기의 후보기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공군이 1990년 초에 도입하기 시작한 C-17기종으로, 이 기종은 원래 장거리 대형수송기이다. 방위청측은 이를 그대로 장거리 수송기로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기의 커다란 동체 안에 급유시설을 장치하여 필요할 때 동중급유기로도 사용하는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생각하였다.⁴⁹⁾

탈냉전시대를 맞아 자위대의 새 모습을 제시한 「신방위대강」에 따르면 재래식 무기를 과감히 축소했으나, 첫째, 해군력의 핵심인 잠수함부대의 현행 유지, 둘째, 헬기공수여단 등 기동부대의 증강, 셋째,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첨단장비 보강 등 군사력의 효율화를 통해 전력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본부 신설은 일본판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구축을 넘보는 자위대의 최대 야심작이다. 이는 ‘밖을 지향하는’ 자위대 변신의 신호탄이라고 보여진다. 신대강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전수방위개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는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고 군사력의 전진배치를 계속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신방위대강」은 선진국의 군비억제 경향, 국내의 정권교체, 그리고 재정사정 등 국내외 요인을 고려하여 외형적인 축소 방향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을 21세기의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만

48) F-15는 중국주력기 SU-27과 견주어지는 우수한 전투기이다. 「조선일보」, 2001. 8. 23.

49) 참고로 C-17은 75톤(완전군장의 공수부대원이면 약 240명, 보병이라면 약 320명 수용 가능)의 화물을 싣고 4,500km를 한번에 날아갈 수 있다.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일본의 전수방위는 유명무실해졌다.

들기 위한 군사전진화 및 해외파병 기동력 강화 및 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구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방위력 정비에 대하여 1996년 이후에 관한 신방위대강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삼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⁵⁰⁾(1996~2000)을 수행하였다.

이 계획의 방침에 대해서는 기간부대와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신방위대강에서 정한 새로운 방위력 수준으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화·효율화·컴팩트화를 추진하였다. 미·일 안보장체제의 신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의 방공요격능력 부분에서는 장래의 기술적 동향에 대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요격전투기(F-15)를 앞으로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화를 위한 시개수(試改修)를 행하였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초계 헬리콥터(SH-60J)를 도입하며, 장래의 기술적 수준의 동향에 대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날개 초계기(P-3C)를 앞으로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능력향상을 위해 개수를 하였다. 또한 고정날개 초계기(P-3C)의 후속 기종에 관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함정에 대해서는, 호위함, 잠수함, 소해정, 미사일정 등을 건조하였다. 호위함의 건조에 대해서는 호위함 부대 전반의 효율적인 형태에 유의하면서 갱신·근대화를 추진하였다. 해상과 해안에서의 격파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원전투기(F-1)의 후속기종으로서 새

50) 『防衛白書 1996』, pp. 135~165.

로운 지원전투기(F-2)를 도입하며 계속해서 지대함 미사일(SSM-1)을 도입하였다.

수송력 및 기동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송 헬리콥터(CH-47), 수송함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 초계기(C-1)의 후속 기종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공중급유기의 성능, 운용 구상 등 공중급유기능에 관해 검토해서 결론을 얻어 대처하였다.

이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방위관계비 총액의 한도는 1995년 가격으로 대략 25조 1,500억 엔으로 하는 것을 1995년 12월 15일 각료회의에서 확정했다.⁵¹⁾ 일본 정부는 1996년부터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방위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연평균 실질방위비 증가율은 2.1%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별도로 이 기간중 1,100억엔을 긴급재난대책비용 등에 사용키로 해 사실상 방위비 증가율은 2.2%에 이르렀다.

이 계획은 3년후(1997)에 그 시점에서 국제정세, 경제재정사정 등의 내외정세를 감안하여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51) 총예산 중 무기 구입비는 4조 2800억엔이다.

<표-2> 신방위대강: 자위대의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부 대 별	내 용
육상 자 위 대	육상자위대정원		편성정수 16만명 (예비역 1만5천명 포함) 상비정원 14만 5천명
		평시의 지역배치부대	8개 사단 6개 연단
	기간부대	기동운용부대	1개 기갑사단 1개 특과단 1개 공정단 1개 教導團 1개 헬기단
		지대공미사일부대	8개 高射特科團
	주요장비	전차 특과화력	약 900대 약 900문
해상 자 위 대	기간부대	對潛·수상함정부대(기동운영)	4개 호위대군
		對潛·수상함정부대(지방隊)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육상 對潛機部隊	7개대 6개대 1개 소해대군 13개대
	주요장비	대잠수상함정 잠수함 작전용항공기	약 50척 16척 약 170대
항공 자 위 대	기간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8개경계군/20개 경계대
		요격전투기부대 지원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항공수송부대 경계비행부대 지대공미사일부대	9개 비행대 3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항공경계관제부대에 편입 6개 高射群
	주요장비	작전용항공기 (그중 전투기)	약 499대 (약 300대)

<표-3>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 주요 장비의 정비규모

구분	종 류	내 용
육 상 자 위 대	전차	96량
	화포(박격포제외)	45문
	다연발로켓 시스템	45량
	장갑차	168량
	지대함 미사일	24기
	대전차 헬리콥터(AH-1S)	4기
	수송헬리콥터(CH-47A)	12기
	지대공미사일(호크)개선장비	2개군
해 상 자 위 대	호위함	8척
	잠수함	5척
	기타	18척
	자위함 建造計	31척
	초계헬리콥터(SH-60J)	37기
항 공 자 위 대	요격전투기(F-15DJ)	4기
	지원전투기(F-2)	47기
	수송헬리콥터(CH-47J)	6기
	공중급유기	(도입검토 C-17)
	중등연습기(J-4)	59RL

하시모토 총리는 취임이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키 위해 행정·재정개혁 등을 6대 개혁 과제로 선정하면서 1997년을 재정재건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GNP대비 3% 이하로 축소(1997년 4.7%)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 방위력 증강계획(1995~2000)을 수정(1997. 12), 투입예산 중 9,200억엔을 삭감하고 전차(96→60대), 장갑차(168→157대), 호위함(8→7척), F-2 전투기(47→45대) 등의 조달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다.⁵²⁾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197억엔 적은 2,538억엔을 편성, 최초로 감축(전년비 7.3%)되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신뢰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예산은 대폭증액(1997년 2억 1,000만 달러→1998년 2조 9,000억 달러), ‘아·태안보세미나’ 등 다각적인 국방교류를 추진하였다.

전력의 재배치와 관련, 유상 자위대는 정원(17만 6,245명)을 5,141명 감축하고 중부 방면대 13사단(7,100명)을 여단(4,100명 규모)으로 재편하였으며, 즉응 예비자위관 2,006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동북 방면대 6사단 神町市 보병연대 등에 배치하였다. 방위청은 장비 고도화 등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비·보급체제를 확립키 위해 해상자위대에 ‘보급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항공보급처’, ‘함선보급처’를 신설하였다.

1998년도 일본의 방위예산(4. 8, 참의원 통과)은 전년화 0.25% 축소된 4조 9,290억엔(약 400억 달러)으로 기지유지·시설정비와 전투장비 구입분야가 감축되었으나 부대재편을 통한 경량화·기동화와 함께 첨단무기 기속 도입 등 전력증강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8년도 방위예산의 특징은 240조엔에 이르는 재정적자 해소를

52) 『防衛白書 1998』, pp. 120~133.

위해 성역 없이 세출을 삭감한다는 하시모토 정권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고 국제적인 군축 분위기에 부응하면서도, 주요 첨단무기 도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 '전력의 질적 향상'을 지속 추구함으로써 방위능력 제고와 함께 주변유사사태에 대한 개입여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6월 23일 발표한 1998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동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입각한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질적으로는 군사력을 줄이고 있으나 양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술 운용능력 향상 및 군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⁵³⁾

다.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2000년에 확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년)은 25조 1,600억엔 규모이며, 5년 이내에 준항공모함급 호위함과 공중급유기 등의 공격형 장비를 도입, 방위력을 증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⁵⁴⁾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준항공급 초계용 헬기 탑재호위함 2천(배수량 3,500t, 1,900억엔)과 공중 급유기 4대(900억엔)과 공중급유기 4대(900억엔)의 도입이 명기됐다.

이와 함께 최신에 미사일 호위함인 이지스함 2척의 추가 도입(2,800억엔), P3C 대잠수함 초계기 및 C1 수송기의 후계기 개발

53) 『防衛白書 1998』, pp. 46~50, 61~71.

54) 『防衛白書 2001』, pp. 89~102.

(3,400억엔), 정보기술(IT)혁명에 대비한 소형 경량 전차 개발(500억엔), 전투기 F5의 현대화(250억엔)등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의혹이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백서 2001』⁵⁵⁾는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 간에 이해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공군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해양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육군은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대만에 대한 직접 침공능력은 한정적이며 해·공군은 질적인 면에서 대만이 우위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목표가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⁵⁵⁾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2000년 방위백서보다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 방위백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기술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도 된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구와 고이즈미 총리의 자위권의 연구·검토 지시와 맞물린 결과이었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긴축예산을 짜면서도 방위비는 삭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2002년의 긴축예산을 위해 분야별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면서 공공사업·개발원조(ODA) 등을 10% 삭감키로 했으나 방위비에 대해서는 삭감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2001년 일본의 방위비는 4조 9,218엔이며 방위청이 당초 계획한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보다 0.3% 늘

55) 『防衛白書 2001』, p. 60.

어난 4조9,388억엔이다.⁵⁶⁾

일본정부·자민당은 당초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2년 앞당겨 작성하기로 한 데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북한·중국 위협론과 맞물린 것이다.

56) 「朝日新聞」, 2001. 8. 8. 일본방위비가 국내총생산(GNP)에 차지하는 비중은 1% 조금 상회한다. 방위청은 인건비, 식량비 등 고정경비가 방위예산의 45%에 달한다고 하였다.

<표-4>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주요 장비의 정비 규모

구분	종 류	정 비 규 모
육상자위대	전차	91량
	화포(박격포 제외)	47량
	다연발로켓 시스템	18량
	장갑차	129량
	대전차 헬리콥터	10량
	수송 헬리콥터(CH-47JA)	7기
	지대공미사일(호크) 개선 정비 신중거리지대공 미사일	0.25개군 1.25개군
해상자위대	호위함	5척
	잠수함	5척
	기타	15척
	자위함 건조계	25척
	초계 헬리콥터(SH-60 및 SH-60J 개선) 신소해·수송헬리콥터	39기 2기
항공자위대	요격전투기(F-15) 근대화 개선	12기
	지원전투기(F-2)	47기
	수송헬리콥터(CH-47J)	12기
	공중에 있어서 항공기에 대한 급유 기능 및 국제협력 활동에도 이용할 수 있는 수송기능의 항공기	4기

V. 결론 및 전망

일본은 북한의 핵위기 및 노동미사일 발사(1993) 그리고, 대포동 미사일 발사(1998)를 계기로 신방위대강, 미·일 신가이드라인, 주변 사태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 위협론을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교토(京都)대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는 “미·일동맹에서의 중국 변수”란 주제발표(동아시아 연구 저널)를 통해 일본이 21세기의 새 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그는 “급상승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등장이 탈냉전시대에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지, 아니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불안정 요인이 될지가 큰 관심사”라며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1996년 미·일 신안보선언과 뒤이은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1993년 한반도 위기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급부상하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일본처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균형자·안정자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중관계는 계속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⁵⁷⁾

외교·안보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한 부시 행정 부로선 일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인 중국을 억제하는 데 미·일동맹은 필요 불가결하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있는 리처드 아미티지와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2001년 말에 작성, 발표한 초당파 대일정책보고서에서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

57) 『중앙일보』, 2001. 8. 9. 동아시아 정치학자들은 동아시아 연구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의 제3집 ‘중국과 동아시아’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2001년 8월 4일에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권 행사를 통한 안보역할 분담, 관련법 개정을 통한 PKO 활동 참가 확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아미티지는 2001년 5월 8일 동경에서 “미·일동맹을 현재의 미·영동맹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며 “이를 위한 모든 현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시 정부의 일본중시정책을 강조하였다.⁵⁸⁾

일본 입장에서 미·일동맹 강화는 바람직하다. 군사비 부담은 늘더라도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입지가 강화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비록 미국에 의존하는 종속적 지위라 할지라도 준패권국가로 행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 개정에 앞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라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움직임이다.

미·일관계 강화로 인한 변화를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주변국들에 대한 일본의 강경자세이다. 최근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주변국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2001년 방위백서도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첨단무기 개발, 도입을 강조하는 한편 방위청과 자위대의 ‘위상 설정’ 문제를 제기하는 등 주변국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일본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에서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대서양과 유럽대륙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비하면 미·일동맹은 편향적이다.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일본이 태평양과 아시아를 잇는 중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58) 『朝日新聞』, 2001. 5. 9. 아미티지는 미국의 MD체제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일하였다.

미·일관계가 밀월시대를 맞고 있어 일본은 아시아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내세워 안보관련 과제(주변사태법, TMD 체제 개발을 위한 미·일 공동기술 연구 개시)를 해결하였듯이 이번 테러사건(2001. 9. 11)을 계기로 미국의 압력을 명분으로 안보난제를 돌파하려 할 것이다. 일본 연립여당은 이미 2001년 10월 29일 국회에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군대보유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국내외적인 조건을 이용해 일본은 개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위대를 군으로 개편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에 변경을 시도할 전망이다. 산케이와 요미우리 등 일본내 일부 언론들은 이미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도 2001년 10월 국회에서 “일본국민들은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 있다”고 개편을 시사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자민·공명·보수 연합으로는 부족하다.⁵⁹⁾ 여권 내부에도 개헌 반대파들이 있다. 정족수 문제는 물론 상당수 일본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거부감으로 단시일내 개헌을 어렵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개헌’이 이제는 여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상황이다. 고이즈미 특유의 ‘정면돌파’로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근거를 마련한 일본 정부가 자위대 병력을 동원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59)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은 원내 과반수를 겨우 넘긴 241석을 보유하고 있고, 참의원은 247석 중 111석을 차지하고 있다.

에 나서고 있다.⁶⁰⁾ 일본 연립여당이 자위대의 PKF 업무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12.8)시켰으며, 2002년 초에 동티모르에 파견될 60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시설대의 무기사용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군에 대한 연료와 식품의 보급, 소송활동과 파키스탄의 난민을 위한 구호물자 수송을 위하여 약 1,500명을 파병하기로 하였으며 이지스함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은 약 100억~200억엔을 책정하였다.⁶¹⁾

일본 지원부대의 활동범위는 아라비아해와 미군 거점인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 인도양, 태평양, 페르시아만, 동남아시아, 호주 등으로 대서양을 제외한 전 해상을 활동범위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이러한 PKO활동과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사법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군사력 강화에 힘을 쓸 것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002년 봄에 유사법제 정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⁶²⁾ 해상자위대는 중장기 방위정비계획에 따라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건조할 이지스 호위함 두 척에 고도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일본이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는 TMD가 일본에 구축되는 것은 처음이다. 새로 건조되는 이지스 호위함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교토(京都)의 마이즈루(舞鶴) 기지와 나가사키현의 사세보(佐世保)기지에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⁶³⁾

60) 『毎日新聞』, 2001. 11. 31.

61) 『朝日新聞』, 2001. 11. 16.

62) 『東京新聞』, 2001. 8. 17. 유사법제 정비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위대·미군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해안법·건축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손질해 놓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청·국토교통성 등 관련부처 직원 15명으로 정비팀을 구성해 작업중이다.

63) 『東京新聞』, 2001. 8. 17.

설치되는 TMD시스템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NTWD(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시스템과 항공기·선박과의 빠른 전술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공동교전능력(CEC)시스템이다.

미국과 유엔에 지지를 얻은 일본은 정치대국의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권호연. 「일본신방위 정책의 분석 및 자료」. 성남: 세종연구소, 1996.

防衛問題懇談會報告書.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あり方-21世紀向けの展望」.

防衛協力小委員会. 「日本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とりまとめ」. 東京: 防衛廳. 1997.

武村正義. 「小さくともキラリ國: 日本」. 東京: 光文社, 1994.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佐佐木芳隆. 「新秩序への道: 多國間安保日米同盟」. 東京: 中央公論社, 1995.

2. 논문

Funabashi, Yoichi. “Japan and the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Kanayama, Hisahiro. “The Future Impor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124E (June 1994).

Mochizuki, Mike ed. *Toward A True Alliance: Restructuring U.S.-Japan Security Rel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Nye, Joseph.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89
(Winter 1992~93).

渡邊沼夫. "日米安全保障關係の新展開." 『國際問題』 (1998. 3).

北岡伸一. "橋本外交の現状と課題." 『アジア時報』 (1998. 8).

石高健次. "北朝鮮「めぐみさん拉致事件」を徹底追及する." 『諸君』
(1997. 4).

船橋洋一. "日本安保再定義 全解部." 『世界』 (1996. 5).

船橋洋一. "一米安保再定義の全解部." 『世界』 (1996. 5).

疏林直守. "新カイトテイン 絶望への道: 一味安保の根本的轉換を."
『軍縮問題資料』 (1997. 11).

小此木政夫. "日朝國交交渉 と日本の役割." 小此木政夫 編 『ポスト冷
戦 の朝鮮半島』.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4.

張龍雲. "北朝鮮日本人拉致組織「洛東江」の二十年." 『文藝春秋』 (1998.
6).

前田壽夫. "97年版防衛白書を問う:新カイトテインに向けて," 『軍縮問
題資料』 (1997. 11).

_____. "カイトテイン 見直し=戦争への道." 『軍縮問題資料』
(1997. 8).

3. 기타

防衛廳. 『防衛白書』. 各年度.

『世論調査年鑑』. 東京: 日本總理部, 1991.

森本敏. "九十年代末に緊迫する東北アジア." 『世界週報』, 1992. 4.

「조선일보」.

「중앙일보」.

「東京新聞」.

「讀賣新聞」.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